

2015년 일본의 소비세 증세 연기와 재정문제

* 이 자료는 이토 모토시게(伊藤元重) 일본 도쿄(東京)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소비세 연기와 재정 : 2020년도 흑자화에 초점을('14.12.4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

- 아베정부 출범 이후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도 기여
- 2015년도 재정적자 반감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, 2020년 재정흑자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
- 재정흑자 문제는 소비세 증세 연기보다 사회보장비의 급팽창이 더 심각

□ 아베 내각에서 재정적자 축소

- 소비세 증세 연기와 중의원 해산으로 경제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, 아베노믹스 2년에 대한 평가와 선거후 새로운 전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
- 재정건전화를 위해 GDP 대비 기초적 재정수지(primary balance)의 적자비율을 2015년도까지 반감시켜 2020년도까지 흑자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목표임
- 기초적 수지 목표는 2010년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내걸었던 정책으로서 아베 내각이 그 목표를 답습한 것인데, 민주당정권시대의 2012년도까지 적자는 거의 축소되지 않고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야 크게 개선됨

□ 디플레이션 탈출책,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

- 이 같은 변화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,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움
 -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세수가 줄어 들고 더욱이 재정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정도의 세출삭감이나 증세가 필요함
 -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움

- 아베내각이 디플레이션 탈출책을 실시함으로써 동시에 재정건전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
- 아베내각 출범 이전 2012년도 재정상황은 공채발행액이 44.2조 엔으로 일반회계 세입(예산단계)의 세수 42.3조 엔을 상회하는 기이한 상황이었음
- 아베 정부 2년 동안 이런 상황은 해소되어, 2014년도 예산의 세수가 50조 엔까지 늘어나고 공채발행액은 3조 엔에 그침
- *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수치는 더욱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

□ 소비세율 인상도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

- 디플레이션 탈출만이 아니고 금년 4월 소비세율을 8%로 인상한 성과도 큼
- 아베내각이 소비세율 인상을 실행에 옮기는 데, 2013년 이후 실시된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 등에 의한 경기부양책의 기여도 컸음
- 다만,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, 아베노믹스의 과속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2014년 이후 경제지표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실망으로 이어지게 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음
- 2014년 3분기의 GDP성장율이 마이너스로 예상외로 나뉘었던 것도 이러한 실망감을 크게 했음

□ 일본경제의 당면 과제

- 그러나 2013년 1~9월 기간과 비교하여 2014년 1~9월 기간에 GDP 수준이 높은 것도 사실임
- 동 기간 중 결코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이 아니며, 현재 내년 이후 경제전망을 밝게 하는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님
- 다만 현재 일본경제가 다소의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
- 기업실적은 과거 최고수준인데도 투자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음
- 고용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이며, 피고용자소득의 증가율은 과거 17년 동안 최고인데도,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음

- 그러나 이것도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크며, 가까운 장래에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
-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을 여하히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임
 -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, 선거후 성장전략을 가속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 이에 기업실적의 개선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성과를 올릴 것임

□ 선거후 재정건전화 전략

-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목표와 2020년도 목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됨
 - 일단 소비세 증세 연기로 2015년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나, 그렇다고 세출의 재검토나 세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
-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15년도 목표보다도 2020년도 목표로서, 적자반감보다는 흑자화가 중요한 목표임
- 2014년 7월 일본 내각부의 시산결과에 따르면, 아베노믹스의 성장 시나리오대로 간다 하더라도 2020년도 시점에서 아직 GDP 대비 1.8%정도의 적자가 남게 됨
 - 성장이 계속되면 상당한 세수증가가 기대될 수 있으나, 그렇더라도 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증가를 커버하기는 어려움

□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세출문제 재검토 시급

- 당분간은 2015년도까지 적자반감의 확실한 달성을 목표로 한 다음, 사회보장개혁 등 세출문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더욱 서두르고 필요하면 추가증세 논의를 해야 함
- 또 2020년도 흑자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도 사회보장개혁을 중심으로 한 세출문제를 조속히 재검토해야 함
 - 2015년도 목표를 철회할 필요까지는 없으나, 2020년도 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

- 2017년 4월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한 세수감소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2020년 목표를 연기해야하는 영향은 없음

* 기초 재정수지는 국채 비용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소비세율이 인상되어 있으면 연기와는 관계가 없음

-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출의 재조정, 디플레이션 탈출과 성장에 의한 안정적인 세수확대, 그리고 증세에 의한 세수의 확보, 3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음
- 소비세율 인상은 연기되었으나 2017년 소비세율 재 인상 시에는 경기조향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, 그 시점에서 확실히 세율인상이 이루어질 것임
- 이러한 토대위에서 세출에 대한 재검토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소비세 인상 연기로 소비세 2%의 1년 반 분인 8조엔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나, 이보다는 매년 1조엔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함
- 이번 세율인상 연기발표로 국채금리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적는데,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임
- 국채시장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일본은행의 본의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,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화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임
- 선거후 세출억제효과가 있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. 